



조 원 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6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전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99

조원회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 · 교육감과의 일괄질문 · 답변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조원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7대 의정활동 첫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으며,
누구나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이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등에 총 1조 6,662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대전은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난항에 빠졌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둔곡지역의 첨단산업용지 조성으로 외부 첨단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대전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과학벨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과학벨트로 무지갯빛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사업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양보하며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신동·둔곡·구룡동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학벨트사업이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책사업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결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국가와 지역에 내준 분들이기에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이주자 보상 문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시는 주민들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보상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대전시가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우리 대전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책임감을 갖고 미래부와 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민 주택 부족과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문제입니다.

2014년 9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거점지구 내 정주인구를 6,240명으로 산정하고, 2,136호의 아파트와 330호의 단독주택 등 총 2,466호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정주인구가 약 9,500명이고,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유동인구 700명까지 합칠 경우 약 1만 200명이 넘는 상황으로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2,466세대 주택건설계획으로는 기존의 정주인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인구수 2만 2,000여 명에 7,000여 호의 주거시설을 건설한 것을 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는 정주인구수 1만 200여 명에 2,466여 호

만을 건설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표방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위상에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을 3,000여 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세종시와 거리가 3km밖에 되지 않으니 세종시로 가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사업계획구역 안에 집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원치 않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3,000여 호 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부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보면 거점지구 내 학교부지는 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한 곳만 명시되어 있고 이주자택지는 지구 내 제일 외곽지역인 네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 통학문제와 상권 및 근린생활시설 분산입지에 따른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신설해줄 것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한 곳으로 집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신동·둔곡·구룡 지구에 이주민들이 수대에 걸쳐 살아온 삶의 역사와 발자취를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마을 기념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둘째,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동·둔곡·구룡지구는 지난 2005년 대덕특구 1단계 개발 계획에 산업용지로 지정된 이후 2009년에는 첨단의료복합산업 단지 예정지로, 2011년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 되는 등 주요 사업계획들이 줄줄이 발표된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경제활동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 있을 보상과정에서 또 다시 불합리한 이주대책 기준일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의 죽동지구와 신동·둔곡지역은 똑같이 지난 2005년 7월에 대덕특구 1단계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죽동지구와 신동·둔곡지구 간의 보상시기 및 이주 대책 기준일을 보면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죽동지구는 2009년 9월 보상기준 시점으로 보상받으면서 2008년 1월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올 9월에 배포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보상 안내문에서는 신동·둔곡·구룡지구 주민들에게는 2015년 상반기를 보상시점으로 정하고, 이주대책 기준일은 대덕특구 2단계 지정시기인 2009년 7월 시점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죽동지구는 1년 9개월 전의 표준지가로 보상을 받은 반면, 신동·둔곡·구룡지구는 6년 전인 2009년 7월로 이주 대책 기준일을 정할 경우 토지보상 기초가 되는 표준지가의 저평가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신동·둔곡·구룡지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약 43% 정도의 표준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주장처럼 6년 전인 2009년의 표준지가로 보상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해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보다 현실적인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이주대책 기준일을 과학벨트 실시계획 승인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는 지장물 및 영업권 등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사의 재정형편을 핑계 삼아 보상착수 후 6개월까지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고, 8개월 이후에는 3억 원까지 현금보상으로, 3억 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 보상하며, 9개월 이후에야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당장 보상할 돈이 없으니 급한 사람은 채권으로 보상 받아가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으면 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식입니다.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아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금도 기한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급대상 토지 면적 및 공급가격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이주주택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이주주택지 공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주민들은 이주주택지 등 공급대상 토지면적과 공급가격이

혹시라도 다른 사업지구들의 공급기준에 못 미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된 세종시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을 보면 획지형 이주자택지는 330㎡까지는 조성원가의 70% 가격에, 33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에 공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주민들은 세종시의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에 맞춰 획지형 이주자택지를 330㎡까지는 조성원가의 70% 이하 가격에, 그리고 330㎡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이하 가격에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철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존경하는 조원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께서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신동·둔곡·구룡동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추진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과학벨트의 정상추진 등 시정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원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의 공동주택 확대, 이주자택지 집적배치, 학교 추가 신설 문제와 마을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 신동·둔곡지역에 건설되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 최초 개발계획 고시 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상 2,466호인 공동주택을 3,000호 이상으로 확대 건설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당초 과학벨트기본계획에는 정주인구를 1만 2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실에 맞도록 6,240명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미래부에서 변경된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사항으로써 현재 거주중인 주민 수를 감안할 때 2,466호의 공동주택 건설규모는 현재로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이주자택지의 집적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조성 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와 LH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청과 협의 결과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법상 학교설치 기준인 6,000세대 이상 9,000세대 이하의 세대 수가 필요한 바 추가신설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증가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유보지를 활용한 추가신설 문제를 LH, 관련기관과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삶의 역사 보전을 위한 마을기념관 건립은 현 제도상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 기준일 문제와 현금보상 문제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은 없습니다만 법원 판례 또는 타 법령의 사례에서 지구지정일 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구개발사업 1단계 사업의 경우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경우도 LH가 특구 2단계 개발계획 고시일인 2009년 7월 21일을 이주대책 수립 기준일로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시계획 승인일을 이주대책 수립 기준일로 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적용사례가 없고 투기세력에게 부당한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보상을 위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반영된 특구개발 2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일을, 2012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LH 측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과정에서 원주민이 소외되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LH와 미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전액 현금보상 요구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시 이미 전액 현금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및 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이주자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세종시의 경우에는 점포 겸용이 아닌 순수한 전용주택용지를 330㎡ 이하로 공급하는 조건이었으나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원주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265㎡ 이하로 공급할 계획으로, 토지이용도 면에서는 세종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세종시와 같이 점포 겸용이 아닌 전용 주거용지로 공급을 희망한다면 사업시행자인 LH와 공급면적 조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가격은 조성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이후에나 결정이 가능함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공급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과학벨트에 대해서 많은 주민께서 인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학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조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원희 의원

다음은 일선 학교에 사용된 석면자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 주변에서 석면의 위험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석면 실태조사 이후 7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2007년 교과부에서 전국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 의심 자재를 분석한 결과 88%에서 석면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자재가 천장텍스였습니다.

하지만 석면 천장텍스와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방향은 깨지지 않는 한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는다는 논리이고, 석면 관련 지침을 철거가 아닌 관리로 정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된 채 방치된 천장텍스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특수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결과 대전광역시 전체 학교 수 572개 중 무려 88.8%인 508개교가 여전히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훼손이 있을 시에만 페인트 칠, 메움재, 실리콘 등을 사용하는 미봉책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대전광역시 관할 교육청의 예산배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석면자재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 기이 교체한 석면자재도 노후환경 개선 차원에서 오래된 천장을 교체했던 것이지 석면의 위험성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석면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와 개·보수 조치를 완료한 학교를 제외하면 279개교, 약 1만 6,000여 개의 교실이 잠재적으로 천장텍스 교체 대상입니다.

교실 1실당 텍스교체 비용이 600만 원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교체를 위해서는 무려 9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 250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석면을 교체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학교에서 석면함유 천장텍스가 철거되려면 70년 이상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석면자재 사용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학교 석면 문제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이 요구되어 오고 있는 만큼 타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있는 석면교체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학교 석면자재 문제에 따른 안전관리조치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숨 가쁘게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서민의 아픔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동호 교육감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대전 교육을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공과 행복, 우리 대전과 대한민국의 부강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석면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조원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석면자재 교체사업에 대한 우선 예산배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매년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3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였으나, 2015년에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 석면 교체 예산을 약 15억 원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석면자재가 교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선 학교 석면자재 문제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는 학교 석면관리매뉴얼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체 전까지는 석면자재의 파손 방지를 위해 석면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관리자를 선임하여 최대한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